

안호영, '가짜뉴스 방지법' 대표 발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가짜뉴스 삭제 의무 규정 신설·거짓 또는 왜곡된 정보의 유통방지 등 담야

더불어민주당 안호영(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 국회의원은 1일 '가짜뉴스'의 확산과 이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한 가짜뉴스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안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국가정보화 기본법'의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안호영 의원은 "세계 주요 국가들이 가짜뉴스와 전쟁을 선포했고 국내에서도 가짜뉴스가 범람해 피해가 속출하고 있지만 피해를 막을 법적 근거가 미비한 만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가짜뉴스 유통자단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정부가 피해자를 보호함으로써 가짜뉴스를 근절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가짜뉴스'를 명확히 정의하고, 포털사이트와 SNS사업자가 가짜뉴스를 지체 없이 삭제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다.

안호영 의원은 "가짜뉴스를 거짓정보에 의한 사실 검증 없이 언론보도의 형태로 뉴스 소비자를 속이려는 명백한 의도성이 있는 것으로 정의해 표현의 자유와 언론

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안호영 의원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이 가짜뉴스의 피해에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법이라면 국가정보화 기본법 개정안은 중장기적으로 가짜뉴스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정보화 기본법' 개정안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정보화를 추진할 때 '거짓 또는 왜곡된 정보의 유통방지'를 통해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안호영 의원은 "사회적 신뢰를 떨어뜨리고 정치적 집단극화 같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가짜뉴스는 개인과 기업에 큰 손실을 초래한다"며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가짜뉴스 유통과 영향력을 제한하기 위한 추가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3월 현대경제연구원은 가짜뉴스가 초래하는 경제적 비용은 당사자 피해 금액 22조 7700억원과 사회적 피해 금액 7조 3200억원을 합해 연간 약 30조 900억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 바 있다. /김진성 기자



밭줄 잡고 올라오는 이낙연 총리 이낙연 신임 국무총리가 공식일정을 시작한 1일 오후 경기 안성 마둔저수지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민안전처, 농어촌공사 관계자들과 함께 가뭄에 말라가는 저수지를 살피며 뒤 밭줄을 이용해 올라오고 있다.

문대통령, 8월 중 가계부채 종합대책 마련 지시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8월 중으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계부채 종합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또 소득분배 악화를 막기 위한 중장기적 구조적 대응방안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1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오전에 있었던 수석비서관·보좌관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날 회의에서 최근 소득분배 악화 원인과 대응방안, 가계부채 현안과 대응방안, 치매국가책임제 및 향후 계획, 민간단체 대북접촉 방북신청 조치 등이 안전으로 올라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득분배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일자리 추경을 통해 소득분배 악화 추세를 저지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일자리, 소득주도 성장으로 전환하는 '투 트랙(two-track)' 접근 방식을 보고하고 토론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김수현 사회수석에게 "소득분배 악화의 어려운 현실을 있는 그대로 국민에게 보고드리고 청와대가 현재의 문제점을 잘 인식하고 있다는 점과 중장기·구조적 대응방안을 별도의 회의를 통해 다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고 박 대변인은 전했다.

박 대변인은 또 "가계부채 현안과 대응방안에 대한 진지한 토론도 있었다"며 "문 대통령은 8월 중으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계부채 종합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사회수석은 문 대통령에게 치매국가책임제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을 이달 말까지 완성해 보고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뉴시스

박범계 "사드 추가반입, 보고 의도적 제외가 문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정치행정 분과의 박범계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4기 추가 반입 논란과 관련해 "이번 사태의 본질은 4기 반입 사실이 알려진 사실이나 아니라 (국방부가) 보고 대상에서 의도적으로 제외시켰다는 것에 있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사드 관련 4기의 추가 반입 사실을 대통령께 보고했는지 여부에 관한 논쟁의 핵심이 흐려지고 있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이미 알려진 사실이나 여부가 보고서 초안에 들어있던 내용을 삭제한 행위의 문제점을 덮어주는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방 안보라인이 군통수권자인 대통령께 의담 보고해야 할 사항을 보고하지 않은 이유로 '알려진 사실'을 드는 것은 알려진 사실 여부까지도 조사해야 하는 업무를 대통령께 지우는 것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앞서 청와대는 국방부가 사드 추가 반입에 대한 보고를 의도적으로 누락했다고 발표했다. /뉴시스



일자리쫓 "올하반기 공무원 1만2000명 신규채용"

'일자리 100일 계획' ... 장기적 민간부문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고용부담금 부과' 검토

정부가 올 하반기 공무원 1만2000명을 신규 채용한다. 또한 장기적으로 민간부문에까지 비정규직 사용사유를 제한하고 과도하게 비정규직을 채용한 대기업에는 고용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1일 오전 서울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이같은 내용의 '일자리 100일 계획'을 발표했다.

이 부위원장은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일자리 100일 플랜'으로 발표한 공약에 추가 과제를 발굴하고 부처 협의를 거쳐 취임 후 100일 동안(5월10일~8월17일)에 추진할 일자리 정책을 마련했다"며 "취임 100일내 일자리 중심 행정체계를 완벽히 정부 조처만으로 추진이 가능한 과제들은 가시적인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중장기 과제에 대해서는 '5년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공공부문 81만 일자리 로드맵' 수립에 앞서 하반기 공무원 1만2000명 추가 채용 관련 비용을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한다. 올해는 시급히 인력 확충이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수시증원하고 내년부턴 공공기관 기능점검·분석과 연계해 '중기 인력운영계획' (2018~2022년)을 수립해 단계적으로 일자리를 확충한다. 로드맵에 맞춰 총정원량과 수당규정 등도 개정한다.

고용노동부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TF(태스크포스)를 설치, 현장실태 조사를 거쳐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로드맵'을 내놓는다. 다만 각 기관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전환 방식은 노사 협의를 통해 마련토록 한다.

여기에 7월까지 공공기관의 '2017년 경영평가편람'에 일자리 관련 지표를 강화해 공공기관 스스로 일자리를 늘려가도록 유도하는 게 일자리위원회의 목표다.

민간부문에서 화두는 '비정규직 사용자

유 제한'과 '고용부담금 부과' 방안 검토다.

이 위원장은 "실태조사를 거쳐 합리적 수준에서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제도 도입 검토하겠다"며 "상시적·지속적 업무나 생명·안전에 관한 업무는 적어도 비정규직을 채용해선 안 된다고 사회적으로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과도하게 비정규직을 두는 대기업엔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한다"고 했다.

대신 올 연말 일몰이 도래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연장하는 등 세제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고 주당 노동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공약에 대한 공약대로 2020년까지 이행하겠다고 거듭 확인했다.

이 가운데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 이 위원장은 "주당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근로

기준법 개정안이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당과 국회에 부탁드린다"면서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는다면 고용부의 행정해석을 폐기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경우 영세자영업자와 임금이 줄어드는 노동자 보호를 위해 이달 내 종합지원 방안을 준비한다.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에 인건비 및 설비 투자를 확대 지원하는 등의 방안이 논의 중이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하고 중소기업 모태조립 펀드를 활용해 3000억원 규모의 패지부활 '삼세번 재기지원펀드'를 조성하는 등 중소·창업기업 지원 대책을 세웠다.

한편 일자리위원회는 6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추경으로 청년과 여성, 중장년 일자리를 지원한다.

현재 고용부의 취업성공패키지 제도 중 집중취업알선 단계(3단계)와 비슷한 수준에서 '청년구직수당'을 신설한다. 육아휴직 급여를 현재 통상임금의 40% 수준에서 첫 3개월간 80%로 인상한다.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 인원을 3만개 더하고 참여수당도 올리기로 했다. /뉴시스

www.jbe.go.kr
전라북도교육청
JEOLLABUKDO OFFICE OF EDUCATION

수업나눔과 평가혁신을 통한 즐거운 학교문화 조성_ 두 번째 이야기

“아침의 여유! 이게 긍정적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 등교시간 늦추기로 아침이 행복한 학교 만들기 -

“달라진 모습이에요? 부모님과 아침밥을 먹고 학교에 가기 때문에 힘들었던 아침수업에 대한 부담이 많이 줄었어요.” - 조이현 (군산남고 1학년)

“가만히 아이들의 눈을 바라보고 몇 마디 건네는 대화 속에서 그동안 서먹해졌던 관계가 신기하게도 좋아지는 걸 느끼고 있어요. 아침의 여유! 이게 긍정적 변화라고 생각해요.” - 신혜연 (두 아이의 엄마)

“확실히 수업시간에 집중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허둥지둥 뛰어 오는 아이들이 줄어서 생활지도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고, 수업준비도 충실하게 할 수 있어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 박은희 (우곡초 교사)

미안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가난은 학교를
복합한 교육
혁신을 통해
복합한 교육

“이것이 행복한 학교는 학생의 과중한 학습부담을 줄이는 원천 기정의 '보리밭' 역할을 재검토하기 위해 시작된 따뜻한 교육정책입니다.”